



여의도연구원

국민행복을 디자인합니다

정책세미나 자료집

발행인 이주영

발행일 2014. 1. 21.

민영화 괴담: 장난인가, 장사인가? - 「거짓선동의 원인과 대책」 토론회 -

- 목 차 -

- I. 민주주의 허무는 괴담 비즈니스 (홍성기)..... 1
- II. 대재앙이 되고 있는 소셜 미디어 현상과 대책 (손태규)..... 21
- III. 나의 말은 사실, 너의 말은 괴담 (김철균)..... 29
- IV. 보수의 북한 콤플렉스와 진보의 시장 콤플렉스가 괴담을 만든다 (김대호) 37
- V. 괴담 확산 방지를 위한 당·정·청의 위기관리론 (김구철)..... 45

담당 : 정재호 연구위원
(02) 2070-3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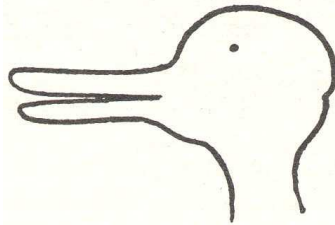
민주주의 허무는 괴담 비즈니스

홍성기

(아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수)

1. 허구에 바탕을 둔 괴담, 정치적 음모론, 정치적 편집증, 마타도어(matador) 등은 친족을 이루는 현상들로서 이들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남이 뭐라고 하더라도 전혀 설득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시각을 고집하는 현상은 괴담류 이외에도 의처증, 과대망상증과 같은 부정적 정신병리적 현상에서도 찾아 볼 수 있지만, 기존에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나 가설, 법칙, 패러다임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직, 재평가함으로써 학문적 발전이 꾀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실제로 인간이 사물을 보는 눈은 기억, 지식, 편견에 좌우될 수 있고 이런 현상을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전쟁 중의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심리학과 철학에서 자주 인용되는 '토끼-오리' 그림으로서 토끼로도 오리로도 볼 수 있지만, 토끼와 오리 둘을 동시에 볼 수는 없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각도 인간의 마음에서 '조직'한다는 점이다.

<그림1> 토끼-오리



2. 괴담이나 정치적 음모론 등은 위의 '토끼-오리' 그림처럼 사실을 새롭게 조직하고, 필요하면 적절하게 거짓이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추가하여 새로운 스토리를 만든다. 예를 들어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때, 미국산 쇠고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증명하는 근거로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제시되었다.

- ① 미국에서 광우병소가 발견되었다.
- ② 미국은 전체 도축소의 0.1%만 검사한다.
- ③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견되었으며, 한국은 30개월 이상도 수입하고자 한다.
- ④ 살코기에도 광우병 원인물질인 변형 프리온이 들어 있다.
- ⑤ 광우병 발병에 필요한 변형프리온의 최소량은 열려 있다.(매우 적은 양으로도 소는 감염된다.)
- ⑥ 인간광우병환자는 100% M/M형이고 한국인의 95%가 M/M형 유전자를 갖고 있다.
- ⑦ 인간광우병의 잠복기는 최대 50년까지 예상된다.
- ⑧ 유럽의 특정위험물질 규정이 미국보다 엄격하다.
- ⑨ 유럽은 미국의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고 있다.
- ⑩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모르는 것이 상당히 있다.

위에 열거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아마 일반인은 위의 사실로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매우 위험하다는 결론을 자연스럽게 내릴 것이다. 그러나 위의 사실들의 맥락과 배경을 모두 살펴보면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결론은 결코 도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유럽과 미국은 쇠고기 전쟁을 벌였는데, 그것은 성장호르몬의 사용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때 유럽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았는데 이 싸움에서 WTO는 미국의 손을 들어 주었다. 나머지 사실들도 모든 이런 종류의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에 자칭 전문가들은 이런 배경을 제거하고 위의 사실들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을 특정한 방향으로 재조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확신'을 갖도록 만들었다.

<그림2> 2차 대전시 독일군의 철모를 이용한 미국의 포스터



<그림3> 독일의 1차 대전 참전군인 기념일 10주년 포스터



3. 이처럼 국민들의 시각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재조직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심리전의 방법과 일치한다. 이런 수법은 과거 대선 당시 김대업의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면제 의혹, 타진요, 천안함 등등 수많은 흑색선전과 괴담, 정치적 편집증과 음모론에 사용되었고 지금도 사용

되고 있다. 학문계에서 서로 경쟁하는 이론을 만듦으로써 인간의 불완전한 인식 능력을 개선하는 것과는 달리, 이런 정치적 괴담들은 사회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간단히 넘길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 현상으로서 이런 정치적 괴담류는 매우 복잡한 사회 현상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괴담현상에 대하여 세 가지 측면을 나누어 고찰 할 필요가 있다. 즉 **‘괴담의 발생’**, 괴담을 정치적, 경제적 이해의 관철 수단으로 이용하는 **‘괴담 비즈니스’**, 그리고 **‘괴담에 대한 대처’**가 그것이다.

4. 괴담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정감록(鄭鑑錄)처럼 정치의 실패로 도탄에 빠져 고통 받고 있는 기층민의 염원을 담은 경우도 있고, 미네르바 사건처럼 분명하지 않은 심리적 동기가 그 원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처럼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괴담의 최초 작성자나 배포자를 찾아낸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미네르바 사건에서처럼 작성자를 찾아내어도 고의성을 입증하여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이 사건의 처벌근거였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위헌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이런 괴담류의 유포는 방지하기도 처벌하기도 어렵다. 특히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거짓’을 말하거나 유포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괴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괴담을 금지시키려는 시도는 이해될 수 있어도 대부분 별 성과가 없으며, 차라리 부작용만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 사실 수많은 허구가 인터넷에 돌아다니지만, 이들이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와 같이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아니면 선거기간 중에 특정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광우병 촛불시위처럼 이념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특정 세력에 의해 이용되는 **괴담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명예 훼손의 경우는 사실상 신체적 상해나 다름없이 치명적이고 지속적인 고통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형사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괴담 혹은 편집증과 같은 의혹제기가 개인에게 국한될 경우 사회의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6. 문제는 정치적 **‘괴담 비즈니스’**라고 부를 수 있는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다. 괴담 비즈니스 역시 역사가 오래되어 과거 왕조시대에는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역모’**를 뒤집어씌우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괴담 비즈니스의 특징은 이들의 목표가 권력 지향적이고 따라서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장악하려는 시도와 결합된다는 점이다. 왕의 **‘귀’**와 **‘마음’**을 잡고 있는

측근에게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듯이, 현대의 대중 사회에서는 권력의 출처인 선거와 각종 여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인터넷, 트위터와 같은 SNS 매체를 이용한다.

7. 문제는 괴담 비즈니스, 즉 허구를 이용하여 대중의 여론을 움직이려는 시도를 막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의 이해갈등을 조정하는 두 개의 규범, 즉 도덕과 법에서 전자의 측면이 더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시에 시민단체, 정당, 언론 그리고 자칭 전문가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과장·선동하였을 때에 이것을 정부가 막을 방법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는 사실상 없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제기된 ‘나경원 1억 피부과 사건’과 같은 흑색선전의 경우 <시사 인>이라는 잡지가 작성자였고 경찰이 명예훼손 사건으로 수사하였으나 사실상 뾰족한 대처 방안 없이 흑색선전의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설사 이런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더라도 이미 선거가 끝난 후가 되어, 만일 피해자가 선거에 당선이 되면, BBK 정봉주 사건처럼, 정치보복으로 비판 받고, 선거에 지게 되면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된다. 게다가 이런 흑색선전에 대한 언론의 보도 역시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지극히 편향되고 이들을 퍼 나르는 인터넷 블로그나 한국판 위키와 같은 곳에는 그 내용이 그대로 남아 시간이 지날수록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인 흑색선전인지 파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나경원 1억 피부과 사건’에 대해서도 이 여성 정치인을 극히 적대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한국판 위키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경원이 강남의 고가 피부클리닉에 출입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시사인의 보도에 의하면 (...) 처음 취재에 나섰을 때 원장이 기자에게 연회비가 1억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이며 다른 회원 중에도 1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논란이 확산된 이후에는 원장과 나경원측에서 1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나경원이 지불한 치료비의 정확한 액수는 연간 500만원에서 한 번에 500만원 등으로 일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8.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철도공사 민영화 괴담’, ‘의료 민영화 괴담’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당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가 이용하고 있지만, 이런 괴담 비즈니스를 강제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 그것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질의 정치문화와 이념투쟁의 전위부대 수준의 시민단체, 이해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식인의 허영, 사실 확인과 전달보다 정파적 운동권으로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는 언론인의 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저질의 괴담 비즈니스를 용인하고 즐기는 국민의 수준이 배경을 이루고 있다.

9. 한국에서 정치적 괴담 비즈니스는 선거운동이나 사회적 분쟁의 경우 **표발 같거나 투쟁에 기본적으로 뿌려야 할 표준적 처방**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점은 '의료 민영화'와 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괴담, 즉 괴담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주장이 야당이나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곳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개인병원의 경우 개인의 소유라는 점에서 공영화될 가능성은 있어도 민영화될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이들 개인병원 의사들이 주요 회원인 대한의사협회에서 잠시나마 '의료 민영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한국에서는 이제 투쟁의 표준 방식으로 괴담이 자리 잡았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것은 원래 간절한 추도와 애도의 표현이었던 촛불모임이 모든 투쟁과 선동의 기본 방식으로 촛불시위가 된 것과 매우 흡사하다. 그것은 **사적, 집단적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공의 고상한 이해관계로 포장하는 것이고,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흑색선전도 그 명분은 후보의 인격이 정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의 사생활도 투표자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의 관음증을 정당한 공적 행동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여기에 세미 포르노와 같은 내용을 공급하는 것이다. 아래는 위의 '나경원 1억 피부과 사건'에 대한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의 논평이다.

Q: 사실 이 보도가 선거를 지금 한 4일 정도 앞둔 지점에서 보도가 나왔고 그 무렵이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만큼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건데요.

A: 예, 그러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보면 선거에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는 당연히 엄단을 해야 되구요. 다만 선거 과정에서 후보를 검증하다 보면 어느 쪽이나 의혹을 제기할 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진실은 아니지만 진실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어야 되구요.** 그런 과정을 통해 검증될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 이런 과정들이 규제된다면 선거자유 자체가 봉쇄되기 때문에, 결국 그 경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이것이 핵심적인 쟁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 2월 1일 MBC 라디오 "김창욱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의 인터뷰 내용)

위 인용문에서 강조한 부분의 내용은 '선거자유'가 봉쇄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실이건 아니건, 공적 생활이건 사생활이건 '후보의 모든 것을 까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미셸 푸코가 중세의 고해성사와 현대의 포르노가 '까발린다는 점에서' 직선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것처럼, 한국의 선거판도 포르노화 하였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특히 이런 정치적 마타도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도 대부분 '자유와 자유의 토대인 책임에 대한 성찰'이 결여되어 '뜻대로 하세요(As You Like It)'를 판결의 근거 조항으로 삼고 있는 듯하다. 또한 정보는 쏟아지지만 대중들

에게 전달 될 수 있는 진실의 깊이는 극히 얇아, 복잡한 사실이나 정책판단 보다 단순하고 감성적 주장이 훨씬 설득력을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괴담과 정치적 흑색선전의 철새 도래지로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괴담에 관한 한국에는 진입장벽도 출구전략의 고통도 거의 없다.** 실제로 ‘나경원법’이라고 부르는, 선거 시의 흑색선전을 엄격하게 처벌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유아무야 되었다. 그 실효성도 의문시 되었지만 흑색선전 사용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국 정치인 대부분의 이해가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이처럼 흑색선전을 자유 방치하면서도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정확하게 흑색선전의 목표를 방지할 목적으로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 공표 전면 허용이 유권자의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지는 의문시 되고 있지만, 흑색선전의 효과는 이미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림4> 우희종 교수가 주장하는 ‘진실과 거짓’의 사회적 구조

배아줄기세포사태와 광우병사태

	배아줄기세포 사태	미국 쇠고기 수입 사태
상황 제공자	전 서울대 교수	정부 (농수산부)
주장 내용	과학적 업적	안전한 수입조건
예상 효능	원천기술로 인한 국익	FTA 타결을 통한 국익
문제점	과학적 사실 조작	검역주권 포기과 전면 개방
문제 제기	방송국	과학자/방송국
정부 입장	상황 조기 종료	상황 조기 종료
주장 내용의 실태	논문 조작	무조건적 굴욕 협상
⇒ 주장하는 내용의 권위	Science 학술지	OIE 국제 기준
상황의 증폭	끊임없는 변명	끊임없는 합리화
지지자들의 태도	음모론	적색론
주류 언론의 태도	무조건적 지지	무조건적 지지
맹목적 종교 지지	불교	기독교
관변 과학자들의 태도	옹호	옹호
상황의 진행	논문 조작 인정	OIE 기준의 변경 가능 짜맞추기 기준 작성 인정
일반 시민의 태도	대부분 지지	대부분 반대
최종 결과	불구속 기소	?

10. 주목할 점은 이런 괴담 비즈니스에서 지식인과 전문가의 역할이다. 철도공사 불법파업 시에 노조를 지지한 이철 전 코레일사장의 주장은 ‘영리화=민영화’라는 사적(私敵) 정의의 오류이고, 그의 주장이 옳다면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적자 사기업은 모두 공기업’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명백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이철 전 사장의 주장은 국민에게는 불편부당한 전문가의 견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시에도 몇 명의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등 자칭 광우병 전문가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극도로 과장하였다. 이들은 몇 년간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한국정부의 공식기관인 식약청의 판단과 권위를 무너뜨리고, 국제수역기관의 전문가 판단 역시 미국정부의 압력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광우병 괴담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국내외의 공적권위를 공격함으로써 신뢰의 공백상태에서 사적 권위를 진실과 정의로 포장하여 국민과 언론, 정당, 시민단체에 거짓 정보를 저항 없이 제공할 수 있었다.**

11. 놀라운 점은 ‘전문가-언론-시민단체-정당-국민’이라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정보 유통의 되먹임 회로를 통해 괴담이 빠른 속도로 엄청난 수의 국민의 믿음을 획득하면, 나중에 그것이 허구임이 드러나더라도 이런 자칭 전문가들은 전혀 사회적, 학문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 괴담 유통의 되먹임 구조 속에 관여된 사람, 단체가 너무 많아 일종의 사회적 공범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우병 촛불 시위 시에 참가한 정치인이나 정당,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들이 잘못을 인정한 적은 거의 없다. <MBC PD 수첩>의 경우 사과 방송을 하더라도, 것처럼 무책임한 선동적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법부에 의해서도 이들의 주장은 인정되고 있다.

<그림5>

» 연사 사회 _ 황상익 _ 서울의대 교수

- 광우병, 과학적 진실은 변화했는가?
우희종 _ 서울대 교수
- 왜 재협상이 필요한가,
국제적 미 쇠고기 수입조건 변화와 한국
박상표 _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 피디수첩에 대한 검찰과 조종동의 여론조작
조능희 _ MBC <PD수첩> 전 책임 PD
- 촛불 2년, 정부 언론장악과
조종동의 언론왜곡 어디까지 왔나
김서중 _ 민교협 공동대표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한미FTA 및
자유무역협정의 현황과 과제
이해영 _ 한신대 교수
- 촛불운동의 요구와 현재 한국사회
우석균 _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촛불2년의 MB정부, 경제를 살렸나
정태인 _ 성공회대 겸임교수

» 일시 2010년 5월 19일(수) 오후 2시
»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

12. 괴담 비즈니스에는 항상 정치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있음은 명백하다. 광우병 괴담의 발생 배경에는 한미FTA에 대한 반대가 있었고, 신자유주의를 도덕적 타락으로 믿는 집단에서는 광우병 괴담의 날조와 유포를 극히 정당한 저항 행위로 판단하였다. 이점은 2006년 민노당의 한미FTA 반대 시위의 구호와 2008년 MBC <PD 수첩>의 배경 타이틀이 사실상 표절수준으로 흡사하다는 점에서도 명백하다.

13. 한미FTA 반대와 결부되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한국의 좌파는 대규모 촛불 시위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사실 대중적 열기를 정치적 변혁으로 유도하는 것은 대중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혁명의 ABC로서, 한국의 좌파는 2002년 월드컵 대회 시에도 서울을 휩쓸던 붉은 악마의 응원열기를 통일운동으로 전환시켰으면 하는 꿈을 갖고 있었다. 즉 자유 민주주의 통일이 아닌, 북한식 사회주의와의 체제통합에 대한 한국 우파의 저항을 촛불시위에서 확인한 대중적 열기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2008년 12월 29일 백낙청 교수는 「창비주간논평」에 이런 희망을 밝혔다:

관건은 ‘촛불소녀’로 상징되는 발랄함과 유쾌함이 한층 절박해진 군중과의 결합을 통해 또 한번 새로운 시위문화를 창출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중의 토론과 합의를 이어받아 언론과 여러 전문집단, 권익집단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정당들과 함께 건설적으로 국정**에 기여하는-단순한 시위참여가 아니라 국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길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자면 길을 닦는 작업이 상당정도 미리 진척되어 있어야 하며, 그랬을 때 한국사회에서 국민주권과 민중자치, 그리고 **한반도 분단체제의 극복**이 2009년 새로운 촛불과 함께 큼직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백낙청 교수가 2009년에 일어나기 기대했던 한반도 분단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촛불시위의 양상은 광우병 촛불시위 때보다 훨씬 과격한 ‘불법 폭력시위’일 것이라고 그는 예측했다. 그는 MB정부가 폭력시위를 선호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사실 아래의 인용문에서 누가 이런 불법 폭력시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실제로 바라고 있는 지 알기는 어렵지 않다.

어차피 선택은 파국 아니면 새로운 거버넌스다. 내년 봄에 대규모 군중시위가 벌어지는 일은 그 누구도 막기는 어려울 듯하며, 정권이 하기에 따라 겨울이 채 가기 전에 그런 사태가 도래할 수도 있다. 그 주력부대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를 노래하는 촛불군중일지 아니면 햇불 들기도 마다 않는 배고프고 성난 군중일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아마도 양자의 결합으로 시작되기 십상인데, 정부로서는 후자의 ‘불법 폭력시위’를 오히려 선호할 가능성도 크지만 그것이 정부에 꼭 유리한 씨나리오가 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어느 경우든 2008년 초 여름의 별처럼 아름다운 축제마당이 그대로 재연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림6>



<그림7>



그러나 백낙청 교수의 분단체제의 극복에 찬 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바로 천안함 폭침이 그것이다. 백 교수 스스로도 만일 북한이 정말 천안함을 폭침 시켰다면 이명박 정부의 5.24 경제조치는 합리화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바꿔 말해 그가 주장하는 현재 진행형 통일, 즉 6.15선언에 의해 남북국가연합 혹은 연방제 통일로의 길에 천안함 폭침이 결정적 장애가 된 것이다. 백 교수의 대응 방식은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이라는 국제조사단의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다. 천안함 폭침조작설이라는 괴담 비즈니스의 정치적 이해는 이런 점에서 광우병 촛불시위 때보다 더 스케일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즉 MB정부의 대북정책을 강경 일변도라고 비판하면서 통진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를 통해 ‘햇볕정책 2.0’, 이른바 ‘2013체제’를 도입하고자 했던 한국의 좌파는 자칭 전문가들의 천안함 괴담에 집착하였다. 천안함 괴담에 기여한 전문가들 중에서 관심을 끄는 사람들은 재미과학자들이다. 물리학자, 정치학자, 알루미늄 산화 전문가, 수중 음향 전문가 등이 다양한 주장을 하였다. 이들 재미과학자들이 천안함 사건을 보는 시각에서 특징적인 점은 ‘시간이 정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을 떠난 시점에서 이들의 시각이 고정되어 그 동안 한국에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얼마나 큰 변화가 온 지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였다. 이들에게서 일종의 미국의 학문 수준, 제도를 등에 업고 한국을 판단하려는 태도가 역력하였다.

14. 정치적 괴담 비즈니스의 경우 워낙 걸려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괴담의 발생이나 괴담 비즈니스 자체를 억제하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 그것은 사실 정치문화와 지식인의 양심, 민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관련된 인터넷 괴담들도 발본색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익명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은 사실상 무정부주의가 지배하는 곳으로서 오프라인에서나 통용되는 법적 규제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 예를 들어 정홍원 총리는 2013년 8월에 인터넷과 SNS 등에서 떠도는 ‘일본 방사능 괴담’과 관련, “악의적으로 괴담을 조작, 유포하는 행위를 추적해 처벌함으로써 (괴담이) 근절 되도록 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15. 당시 인터넷에는 ‘일본 국토의 절반이 고농도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괴담이 떠돌아 다녔다. 아마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아 본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다. 광우병과 천안함 괴담에서 지식인들의 적극적 관여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적 규명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모든 전문가가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정보의 부족, 개인적 편견과 허영, 이해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들의 사적 주장 모두를 진실 되고 정의로운 판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회적으로 일종의 무정부상태를 야기 시킬 뿐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문가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반드시 권위를 갖고 있는 공적기관이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16.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은 사상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시민적 자유는 사실상 모두 이 자유로부터 도출 된다고 보아도 좋을 만큼 사상의 자유는 중요하다. 중요한 점은 **사상의 자유가 평등한 대화와 내용적으로 완전히 일치 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J. S. 밀은 그의 『자유론』에서 사상의 자유를 평등한 대화의 필요성으로 정당화 하였다. 즉 사상의 자유는 누구나 아무런 이야기나 할 수 있다는 현상적 해석 보다는, 타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역시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화가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공동의 배경지식이 반드시 요구되지만, 사회와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태에 대하여 일반인이 전문적 배경지식을 가질 수도 공유할 수도 없다. 즉 **권위 있고 공정한 전문가 집단의 판단은 사상의 자유가 제대로 기능 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인 것이다.** 물론 이런 공적기관의 판단이 항상 옳다는 주장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 전문가의 양심, 합리적인 논의 구조 그리고 안전성을 위한 넉넉한 마진 그리고 판단 착오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 등을 통해 권위 있는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의 전통을 형성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런 권위 있는 공적기관의 활용은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는 사회에서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중요한 점은 이런 공적권위는 토론기관이 아니라 결정기관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공적기관은 다른 전문가나 국민들의 의문과 이의 제기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답을 해야 하지만, 이들과 논쟁을 벌이는 기관이 아니다. 이럴 경우 공식적으로 논쟁을 종식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17. 괴담에 대한 대처에서 ‘권위 있는 공적기관’의 중요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권위를 외부의 압력으로 혹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한국의 농수산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에 대하여 상이한, 심지어 상반된 판단을 내림으로써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를 미국의회가 비준하도록 만드는 지렛대로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이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형식적으로 별개의 문제임으로, 만일 국제수역기관의 판단을 한국이 받아들인다면 조건 없이 수입재개를 해야만 하는 실정이었다. 여기서 노무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하여 유보적 태도를 보였고, 그것이 자칭 전문가들의 정보 왜곡과 함께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어 ‘소빠=광우병’이라는 등식을 국민의 뇌리에 각인시킨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일어났다.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고 농수산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인하였지만, 국민 다수는 MB정부가 국민건강을 희생하면서 한미FTA 비준을 추진하였다고 믿었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5월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의혹을 말끔하게 제거하겠다고 ‘끝장토론’을 열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기자들은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하수처리장’이 되었다고 정부를 규탄하였다. 실로 정산적인 나라에서도 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질문이 제기된 것이었지만, 기자는 분명 ‘미국산 쇠고기=위험식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질문이었고, 그런 확신을 준 측의 하나는 바로 비판의 대상이 된 농수산식품부 자신이었다.

18. 사실상 괴담의 발생과 괴담 비즈니스 자체를 규제하기 힘들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처 이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다. 이때 적극적인 대처란 권위 있는 공적기관에 의해 괴담이 가져오는 불필요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홍보 기관은 적극적으로 괴담에 대하여 권위 있는 기관의 결정을 제시하면서 전문가들에게는 올바른 의견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이 자칭 전문가들의 사적 주장보다 공적 권위의 견해를 믿게 만드는 것이 괴담 비즈니스의 환경을 제거하는 올바른 길이고, 그것이 공적 권위가 전통을 확립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코레일 민영화 괴담과 관련하여 소통의 부재를 지적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민영화 안 한다’고 여러 번 확약해도 믿지 않는 노조나 야당을 도대체 어떻게 설득하느냐고 반문하였다. 박 대통령의 반박에는 일리가 있다. 민영화는 자연과학이나 전문가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정책결정의 문제로서 그 최고 권위가 대통령임은 명백하다. 더 이상 어떤 정당화도 불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19. 그러나 정책 결정 분야에서 최고 권위인 대통령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 바로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다. 바로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말 바꾸기가 그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운하건설로 바꾸지 않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였고 실제로 임기 중에 운하건설은 없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전 정부에서는 운하건설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였지만, 현 정부 하에서는 운하건설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이런 말 바꾸기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농수산부의 말 바꾸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실제로 ‘철도민영화’나 ‘의료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대통령과 관계 장관이 거듭 약속을 해도 ‘각종 민영화 확산론자들’은 바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말 바꾸기를 근거로 대통령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판단이 의미를 지니려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임기 중 언제, 어떻게 운하건설로 전환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무엇보다도 그런 시도가 있어야 한다. 미래의 어느 정부가 한반도에 운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를 이명박 정부가 미리 준비하여 강의 깊이 준설하였다는 주장은 사실 말하는 바가 아무 것도 없다. 만일 그런 판단을 미래 어느 정부가 내렸다면, 이명박 정부가 깊이 준설하지 않았더라도 운하로 전환할 것이고, 거꾸로 4대강에 설치된 보가 심각한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판단을 어느 정부가 내렸다면 이미 건설된 보라도 철거할 것이다. 만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감사원이 외부의 압력으로 ‘4대강 사업이 운하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것이 양건 전 감사원장의 사임 이유라면, 박근혜 정부는 철도공사 민영화 괴담이나 의료 민영화 괴담을 비판할 자격을 스스로 던져 버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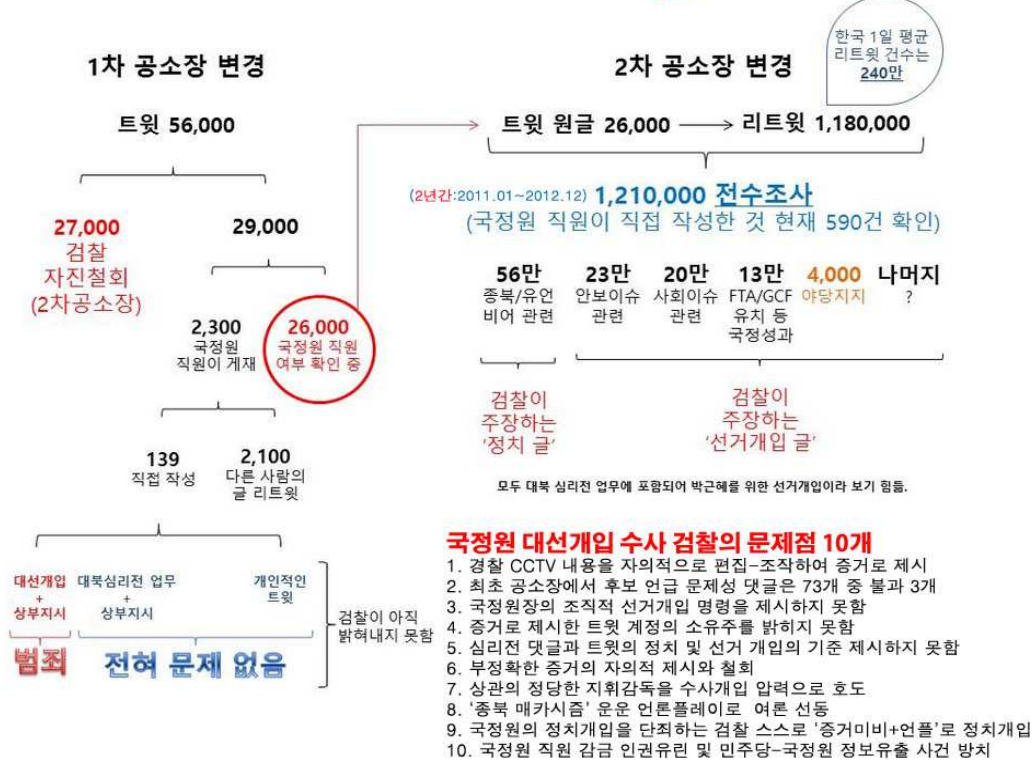
21. 괴담의 천적이 전통 있고 권위 있는 공적 기관이라면, 정부가 공적 기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은 곧 괴담이 자라는 환경을 정부가 나서서 조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한국의 경우 심혈을 다해 공적 기관의 신뢰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며, 심지어 공적 기관 자체가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 있다. 2004년 있었던 이른바 ‘쓰레기 만두 사건’은 자극적인 언론 보도와 함께 식약청이 여론의 압력에 ‘불량만두 제조업체 명단을 공개하여 사건의 파장을 더 키웠다. 결과는 5천억원 이상의 피해와 제조업자 줄도산과 CEO의 자살이었다. 그러나 사법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만두제조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돌이켜 보면 2008년 광우병 사건의 전초전(前哨戰)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한국의 정부 기관도 언론도 국민도 이 사건에서 아무 것도 배우지 않았다.

<그림8>



<그림9>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재판 상황 팩트 총정리(2013.12.14 현재)



22. 괴담 비즈니스의 동력을 정부 기관이 제공한 것은 '쓰레기 만두 사건'의 경우만이 아니다. 2014년 1월 말 아직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상황만을 놓고 볼 때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매우 빈약하다. 국정원의 인터넷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의 기준도 없고, 선거개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인터넷 활동 기간에 대한 정당화도 없으며,

트위터 글의 경우 누가 그런 트윗을 보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없다. 검찰은 ‘이런 저런 상황에서 발송된 트윗은 국정원 직원의 소행일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국정원 직원의 계정이 명백히 아닌 경우가 있음을 변호인이 증명하였다.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지시에 대한 증거가 없고, 그렇다고 불과 몇 개의 명백한 선거개입을 문제 삼자니 국정원 직원의 개인적 일탈임 가능성을 반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증거를 검찰은 제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트위터의 경우 계정 소유자의 신원을 밝혀주지 않으니, 이처럼 국정원 소유계정의 조건을 가설적(假說的)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재판장은 검찰에게 여러 번 증거의 미약함을 지적하였지만, 검찰은 2014년 1월 중순에 열린 재판에서 3주의 시간을 더 주면 증거에 대한 모든 의혹을 불식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검찰의 이런 약속은 지켜지기 어렵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트위터 계정에 대한 국정원 직원 소유의 조건이 모든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실제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지만 그것은 120만개나 되는 계정 수로 인해 불가능하고,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사 변호인이 반박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검찰의 주장은 가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실제 증거가 아니라 증거일 것이라는 믿음에 의존하는 해괴한 기소를 하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서 검찰은 광우병 촛불시위 시에 자칭 전문가들이 행한 태도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무부 장관의 이견(異見)이나 상사의 수사 지휘를 정치적 음모론의 시각에서 보는 태도, 증거에 대한 편향된 시각, 정의를 독점하고 있다는 오만, 언젠가 확실한 증거가 나올 것이라는 믿음 역시 비슷하다.

<그림10> 2008년 촛불시위 때 분신자살한 이병렬 씨



23. 검찰이 제시한 국정원 선거개입의 증거가 매우 허약하다는 지적이 솔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초기부터 야당 대표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폭염 하에서 100일이나 ‘자학적 저항’을 하였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놀랄 일이 아니기도 하다. 괴담 비즈니스가 각종 선거운동과, 한진 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 해군기지건설 반대 등 각종 투쟁의 기본기가 된 우리사회에서 정치적 먹거리가 산처럼 쌓인 국정원 댓글사건이라는 호재를 놓칠 리 없기 때문이다. 놀랍지만 놀랄 수 없는 또 다른 점은 광우병 촛불 시위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 시민단체, 종교계 등이 검찰 수사를 계기로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주장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극도로 분노한 시민들이 분신자살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광우병 촛불시위 시에 MB정부에 분노하여 분신자살한 이병렬 씨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전문가, 시민단체, 정당, 언론 모두 관련이 있지만 촛불시위 선동에 가담한 종교인들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속세에서 일어나는 각종 이해관계나 가치관의 충돌로 야기되는 증오심을 가라앉혀야 할 종교인이, 전문가들도 합의를 보기 어려운 영역에 편향적으로 개입하여 증오심을 부추김으로써 우리 사회의 감정 폭발의 수준을 한 없이 높였기 때문이다. 뒤르켐에 의하면 자살은 타인 살해의 증오를 자신에게 돌린 행동이다. 배의 무게 중심이 위로 올라가면 전복 가능성이 높아지듯이, 종교인들이 괴담 비즈니스에 개입하여 선동을 하게 되면 증오로 인하여 반드시 분신자살이나 테러와 같은 극한적 행동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24. 그러나 허구를 전파하면서 '민주주의의 후퇴', '민주주의의 파괴'를 비판하는 것은 자기모순을 넘어서는 파괴적 행동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란 '국민의 지배'라는 뜻과 함께,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때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에서 허구를 퍼뜨리고 허구에 의존하여 선동을 하는 경우, 국민의 의사결정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심지어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은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그것은 왕정체제에서 주권자인 왕의 판단을 흐릴 경우 왕조가 무너지고 백성이 피해를 보듯이, 민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왜곡할 경우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마찬가지 이치이다.

25.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가졌다는 1차 대전 이후의 바이마르 공화국은 히틀러의 선동에 의해 무너졌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1차 세계 대전이 독일 육군의 패배가 아니라 유태인과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의 사보타지에 패배하였다는 '등 뒤의 비수론'이다. 전쟁의 패배가 가져온 독일 국민의 자존심을 파고 들어간 이 허구는 실제로 그럴 듯 하게 들렸지만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다. 1차 대전에서 패배하기까지 독일의 영토에서는 전투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등 뒤의

비수론'을 전파하는 자들이 교묘하게 이용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독일군은 독일 제국의 전쟁수행능력이 소진되어 항복하였을 뿐이다. 1930년대 대공황으로 독일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히틀러는 '등 뒤의 비수론'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독일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 몇 번의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따라서 허구를 통해, 선동을 통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경우는 물론, 한국과 같이 괴담 비즈니스가 기본 선거 전략이 되어 버린 사회의 민주주의도 그 토대에서 위협받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림11> 2008년 6월 30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주최로 열린 비상 시국미사



<그림12> '등 뒤의 비수론(Dolchstosslegende)'의 선동



26. 새누리당 역시 선거에서 괴담이나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시절 문 후보가 재직하였던 법무법인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로비활동의 일환으로 거액의 사건 수임을 받은 것과 문재인 후보와 관련이 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흑색선전이라는 문 후보 측의 비판이 그것이다. 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그 이전의 민정당 등이 선거철이 되면 이른바 '북풍공작'을 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왔었다. 그러나 이들 의혹의 몇몇은 북풍과는 무관하거나 그 실상이 과장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노태우 정부 시절 KAL기 폭파 사건과 범인 김현희를 선거를 얼마 앞둔 시점에 국내로 체포해온 것을 북풍으로 간주하는 것은 거의 설득력을 상실했다. 아마 괴담의 양과 질을 볼 때 선거를 괴담 비즈니스로 보려는 시각에 대해 새누리당은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인다. 아마도 '김대업 조작'과 '나경원 고액 피부과 사건', 그리고 지난 해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폭풍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 새누리당의 지지층이 일반적으로 흑색선전이나 괴담을 싫어하고 이런 선거운동을 혐오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회창 후보는 민주당과 김대업의 흑색선전에 의해 패배하였지만, 이 후보나 한나라당 지지층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이유는, **흑색선전을 싫어하기에 흑색선전의 결과와 싸우기도 싫어하기 때문일 수 있다.**

27. 그러나 새누리당의 정치적 괴담과 흑색선전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실제로 국민 전체에게 전달되고 있는 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모든 정당이 선거철이 되면 입으로는 정치적 흑색선전을 '규탄하기' 때문에 특별한 인상을 주기 힘들다는 점도 있지만, 새누리당이 흑색선전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가 선거공학적 관점에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선거판에서 흑색선전이 새누리당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싫어할 뿐, 만일 이익이 된다면 새누리당이 흑색선전이라는 정치적 마약에 손을 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28. 국민에게 새누리당은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웰빙족 집단**이라는 인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시에 100일 넘게 전국을 휩쓸던 선동과 광기와의 싸움에 한나라당은 초기의 몇몇 비판 이외에는 아무 것도 기여하지 않았다. 그 배경에 친이-친박계의 알력과 함께 다음 선거에서의 표심 계산이 관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선거 공학적 계산으로는 대중사회에 난무하는 각종 정치적 괴담과 흑색선전에 대처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괴담이나 흑색선전과 논쟁을 통해 싸우는 것 자체가 이미 흑색선전 전략의 반판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괴담의 천적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적기관의 권위와 전통이라는 점은 국민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판단을 무조건 믿는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흑색선전과의 싸움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흑색선전을 이용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신뢰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와 무관하게 한국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정치적 괴담이나 마타도어에 꾸준히 진정성을 갖고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싸움의 절반은 새누리당 자신과의 싸움일 것이다.

대재앙이 되고 있는
소셜 미디어 현상과 대책
-미국 사례 중심으로-

손 태 규

(단국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

1. 소셜 미디어 재앙

소셜 미디어 대재앙! 인류의 삶에 또 하나의 혁명을 가져다 준 뉴 미디어를 미국인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다. 재난(Disaster) 시 큰 위력을 발휘해 온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포되는 각종 괴담과 허위 정보에 따른 폐해와 부작용이 심각하다. 소셜 미디어는 시대와 국가를 초월하여 정치 설득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음모이론'의 가장 즉시적이고 유용한 수단과 방법이다. 정부는 물론 특정 정치인과 정파를 악의적으로 매도하는 국가 및 사회 혼란의 주범이 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가 돋보이는 점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 헛소문들이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를 보다 더 쉽고, 빠르게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펜실바니아 대학교 조나 버거 교수). 미국의 정부, 기업, 언론 등은 소셜 미디어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소셜 미디어 오·남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2. 각종 재난, 사고

1) 허리케인 샌디와 같은 대재앙 때 소셜 미디어가 유포한 가짜 정보는 자연 재해보다 더 큰 위험이었다고 한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멀쩡한 병원이 불타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 911이 마비되었으니 더 이상 전화를 걸지 말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상어 떼들이 맨해튼의 브로웨이를 헤엄쳐 다리고 있다는 등 각종 헛소문을 유포했다. 미국 정부는 자연 재해 때 소셜 미디어의 허위 정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3년 4월 15일 보스턴 마라톤 폭발 사고-3백70만명이 8백70만 개의 트윗을 했다. 그 가운데 30%가 소문과 가짜 정보. 50%는 그냥 의견. 20%만이 정확한 사실과 정보-가짜 정보 때문에 시 전체가 완전 공포 상태에 빠졌다.

2)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연방재난관리청) 웹 사이트에 '소문 통제' 섹션을 만들었다. 어떤 것이 허위 정보인지 확인해서 알려 준다. 그러나 연방 정부가 관계되지 않는 각종 재해에는 지방 정부가 소문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고 있다. 의회 청문회가 열릴 정도로 주요 문제가 되고 있다.

3) 자연 재해 뿐 아니다. 각종 대형사고 때마다 조작된 허위 정보 때문에 정부는 물론 언론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 “너무 죄송해요 아빠. 한 남자가 우리를 죽이려 해요...저는 엄마를 사랑하지만 뇌종양과 싸우시는 용감한 아빠를 더 사랑해요...만약 아빠가 병을 이기지 못하면 저는 천국에서 아빠를 뵈 수 있을 거예요...” 2012년 12월, 28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사고로 숨지기 직전 엘리라는 소녀가 남겼다는 편지이다. 가슴 저미는 이 글을 올린 트위터에 올린 사용자는 “끝없이 리트윗을 할 만하다”고 적었다. 순식간에 4천여 명의 팔로워가 몰려 들었다.
 - “사랑해요 엄마... 착한 아들이 못되어서 죄송해요...천국에서 엄마를 사랑 할게요.” 이 글을 트위터에 퍼트린 사용자는 “무고하게 숨진 어린이가 교실에 살인자가 들어서기 직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찢어진 종이에 연필로 겨우 눌러 쓴 이 편지의 사진은 긴박했던 사고 순간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 모두 가짜였다. 글에 사용된 단어나 표현이 영국식 영어일 뿐 아니라 글을 쓸 상황이 도저히 아니라는 것이다.
 - 저스틴 비버-암 진단-청소년지지 삭발
 - 가짜 납치-트위터에 뉴저지 16세 소녀 피한 납치. 함께 사라졌다 - 3만4천명의 팔로워 구조 요청.
- 4) 언론들은 헛소문을 추적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블로그 개설.

3. 정치

- 1) 인공잔디 선거-가짜 정보로 유권자 동참 유혹.
- 2) 대통령의 IQ
 - 클린턴 182, 카터 175, 케네디 174, 닉슨 155, 프랭클린 루스벨트 147, 아이젠하워 122, 포드 121, 레이건 105, 부시 98, W.부시 91
- 3) 퓨 연구소는 2012년 대선 결과를 분석하면서 “소셜 미디어 이용자는 선거에 끊임없이 부정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 린니
 - 부정적 기사 페이스 북 62%, 트위터 58%, 주류언론 38%.
 - 긍정적 기사 페이스 북 24%, 트위터 16%, 주류언론 15%.

○ 오바마

- 부정적 기사 페이스 북 53%, 트위터 45%, 주류언론 30%.
- 긍정적 기사 페이스 북 24%, 트위터 25%, 주류언론 19%.

4) 2013년 6월 미국 정부가 길로틴 3만개를 유럽에서 수입하고 의회가 정부 목적에 따라 사용할 것을 승인하는 법안 통과

5) 7월 미국이 재난 시 1만5천명의 러시아 군대를 파견받기를 합의.

4. 인종차별 등

소셜 미디어는 인종 차별자들을 위한 배설구가 되고 있다.

‘Social media racism’이란 신조어가 생겼다.

5. 기업

소셜 미디어는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소비자들에게 긴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소셜 미디어 홍보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기업들은 갈수록 소셜 미디어 역풍을 맞고 있다. 홍보전문가들은 가짜 정보에 당하는 기업 현실에 주목하면서 주저 없이 소셜 미디어 재앙이라고 부르고 있다. 기업과 관련 매년 10대 최악의 사고를 선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 기업들은 단순한 비틀기는 회사나 조직의 내부 정책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의도적, 악의적 괴담 유포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에 빠져 있다.

2013년 버거킹 공식 트위터에 해커 침입-허위 정보 확산: “맥도널드에게 팔렸다. 직원 마약 복용” 로고와 이미지도 맥도널드로 바꿨다.

맥도널드 “여전히 버거킹은 경쟁업체. 해킹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즉각 반응했으나 후유증은 상당했다.

6. 청소년과 어린이

미국 소아의학 학회 2011년 연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22%가 하루에 열 번 이상 씩 소셜 미디어에 로그인 한다. 부모들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기술적 지식

이나 능력이 부족함은 물론 청소년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뉴 미디어의 사회화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하고, 자녀들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갈수록 자식과 부모 간 세대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은 크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미국 소아학회 연구는 청소년들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1) 사이버 폭력과 희롱, 왕따 등을 즐겨하고 있으며 이 결과는 우울증, 조울증, 고립감 등 심각한 정신적 폐해를 일으키며 자살을 일으킬 중요한 원인인 될 수 있다고 경고

2) 섹스팅(Sexting): 2013년 1월 뉴욕 타임즈는 이제 '구애의 종말'에 이르지 않았냐는 의문을 던졌다.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친구 문화' 속에서 이뤄지는 즉석 섹스 증가를 우려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청소년 사이에 이미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3) 페이스 북 우울증

4) 사생활 노출: 디지털 족적-부적절한 글, 사진, 비디오를 남긴 흔적이 미래 직장이나 학교 입학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총기, 마약 등 불법 판매자와 사기 판매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나르시스트 경향: 소셜 미디어를 오래 사용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모든 생활 하나 하나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공유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착각해 결국 자기도취에 빠지고 만다. 이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신상명세를 새것으로 고치고, 사진을 올리며, 무조건 친구를 만드는 성향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소셜 미디어 괴담으로부터 가장 쉽게 노출되고, 가장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괴담을 중복 유포하는 가장 위험한 집단이 될 수 있다.

7. 왜 소셜 미디어 재앙이 일어나는가

1) 정신적 결함이 있는 악의적 인간들이 자기만족을 위하여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며 희열을 느낀다.

소셜 미디어에 매몰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단순한 호기심, 분노, 순수한 동정심, 정의감을 유발한다.

2)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의도적 계획적 경우-한국에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8. 대책

1) 중국의 경우: 2013년 9월 대법원이 온라인 루머를 명예훼손으로 기소해 3년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을 만들.

5천 번 읽히고 500번 소셜 미디어에 포스팅할 경우 중국 정부는 정부 비판에 대응하는 웹 사이트를 만들었다.

정부는 부패 고발뿐 아니라 공산당의 정당성, 합법성을 훼손하며 정변과 혁명을 부추긴다는 명목으로 벤처 사업가와 온라인 기고사 등을 온라인 루머 생산 및 유포 혐의로 체포했다.

2) 정치적 목적의 악의적 소문 유포는 대응이 무척 어렵다. 내용에 관계없이 어떤 것이라도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허위 정보라면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사실 정보의 제시만으로 대응이 안 된다. 우발적 사건 사고와는 달리 그 소문들이 평소 의문, 반감을 가지고 있는 정부나 조직, 개인에 관한 것이라면 강한 호기심을 자극하며 막연한 의심과 추정을 강화시켜 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3) 소문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 그러면 소셜 미디어 사용을 중단시켜야 하는가? 불가능하다. 법으로 철저히 통제해야 하는가? 불가능하다. 결국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 반대 주장을 빠르게 전파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부나 기관, 회사 등 관련 조직에 담당 부서와 훈련된 직원이 있어야 한다. 각종 소셜 미디어의 특성을 파악해 능숙하게 활용해서 그 특성에 맞는 정보를 포스팅해야 한다. 즉각 정보 진원지에 확인을 하고 보도 자료를 내고, 소셜 미디어에 그것을 전파해야 한다. 과거와는 다르게 시간 싸움이다.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언론자유의 원칙과 가치, 내용에 대한 국민적 교육이 필요하다.

나의 말은 사실, 너의 말은 괴담

김 철 균

(前 다음 부사장)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기존 전통미디어가 갖는 ONE-WAY 커뮤니케이션에서 생겼던 권력을 분산시킵니다. 이 때문에 언론통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민주주의 기초가 허약한 정권은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붕괴되기 시작했고, 전통적 매스미디어는 편성권과 편집권이라는 권력이 약화되며 새로운 길의 모색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온 스마트 혁명은 불과 4년 만에 3700만대의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우리의 몸에 오감이 아닌 여섯 번째 감각(육감)이 생겨 난 것과 유사한 소통(인지, 센싱)능력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괴담의 문제점은 결국 이 변화 속에서 책임 있는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국민들 개개인에게 원활히 소통되지 못하면 사실이 아니어도 그럴 듯한,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약자가 억울하게 당한, 강자가 부당한 권력을 행사했다고 공감되는 이야기 (예:7번방의 선물)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제가 보았던 두 가지 사례를 살펴봅니다.

〈청와대 근무 당시 사례〉

2011년,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오후 2시 27분 보도되기 시작했다. 서태지가 결혼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깜짝 놀랄 일인데 상대가 이지아였고, 이혼에 이어 재산분할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은 가히 대한민국 전국 이래 최대 스캔들이란 말이 돌 정도의 핫 이슈였다. 공교롭게도 서태지·이지아 소송 기사가 공개되기 13분 전 BBK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건의 판결 기사가 발표됐다. 이지아와 BBK수사팀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 같은 곳(바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모론이 확산되었다.

"서태지·이지아 이혼 소송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BBK 사건을 덮기 위해서 청와대와 국정원이 일부러 흘린 것"이라는.그러나 그날 나온 판결은 BBK사건 수사팀이 어느 주간지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내용으로 이명박대통령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다. 작년에는 서태지, 이은성의 재혼발표가 윤창중 사건의 확산 보도를 막기 위함이라는 루머가 돌았다.

당시의 기사 제목들 중 일부를 소개하면

- '서태지·이지아'사건, BBK덮기용? 누리꾼 의혹제기
- 서태지-이지아 위자료 청구 소송, BBK 사건 무마용?
- 서태지-이지아 이혼소송·자녀 루머, 'BBK 특검' 덮으려?
- 올해도 서태지에 주진우 구속영장이 묻혔다

이 루머에 대해서는 대응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대응도 없었고 지금도 이와 유사한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30대의 48%가 이 루머를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응답했다.

〈대선 캠프 SNS 본부장 근무 당시 사례〉

대선 나흘 전 인터넷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종교단체인 '신천지'와 연루됐다는 흑색선전이 떠돌기 시작했다. "박근혜 후보가 '신천지'라는 종교의 교주를 특별당원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새누리를 한자로 쓰면 '신천지'가 된다"

그러자 '나는 꼼수다'의 김용민이 이를 트위터를 통해 확산시켰다. 다른 나꼼수 멤버들도 '박근혜 굿판 의혹'을 부추긴다. 이 의혹제기는 어떠한 확인 과정도 없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화 되고 포털을 통해 편집되어 대량 확산된다. 그러나 박후보가 교주에게 보냈다는 편지 사진은 합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굿판의혹도 매년 해 왔던 고 육영수여사의 탄신제 공식 행사 사진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만들어낸 의혹이다.

이에 대한 대응은 적극적이었다. 대통령후보가 직접 '흑색 선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연관설이 사실무근'이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캠프는 이를 수십만 카카오톡 친구들에게 전송했다.

스마트 소통 시대, 소셜네트워크 시대가 열리며 사람들은 자기와 성향이 비슷한 SNS 친구들이 추천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의 포털을 통해 유통되는 자기가 좋아하는 매체의 뉴스를 보고,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이트에서 공감하는 나만의 순환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는 그 사실 여부나 과학적 근거와 관계없이 내 주변의 모두가 공감하는 일이라고 믿게 되고 이 믿음의 순환구조가 뭉치고 강화되어 진영의 순환구조를 만들면 자기와 다른 진영의 견해는 권력의 음모라던가 괴담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순환구조를 이용해 특정한 개인이나 세력이 괴담을 만들면 이를 확산하려는 뉴스메이커가 개인의 SNS를 통해 이슈화시키고, 단지 클릭수를 좀 더 유도하려는 일부 언론이 취재 없이 의혹만을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화 하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등록된 인터넷 언론사만 4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언론의 보도라는

명목으로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포털이 눈에 띄게 편집을 해 대량유통되고, 다시 이 자극적 제목 때문에 이미 집단 지성이 아닌 집단 감정 상태에 빠진 네티즌들의 SNS를 통해 무차별 확산되었다는 경험입니다.

이런 독립된 순환구조를 깨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발제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특히나 신뢰를 소중한 가치로 평가 받고 있는 현 정부에서는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 길은 너무나 멀고 어려운 길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국민들이 신뢰 할 수 있는 새로운 권위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돌아가신 김수환추기경께 보였던 국민들의 기대 같은 것이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와는 다른 방법이지만 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이 같은 주제의 사실을 공유 편집하는 '사설속으로' 같은 기획도 좋은 방안이어서 새로운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순환구조를 만들어 내는 소셜 소통(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지난 정부는 불통의 이미지를 뒤집어쓰고 괴담이라고 불리우는 논쟁에 휩싸이며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까지 이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는 75%가 넘는 높은 지지율로 출범하였으나 취임 두 달 만에 시작된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괴담'의 중간고사를 마친 여중생들로부터 시작된 촛불시위로 인하여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지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상황 타계를 위해 대통령은 직접 사과까지 했지만 결국 한달 후 청와대 수석비서관 대부분을 바꾸는 비서진 개편을 했습니다. 이때 정무수석비서관실 산하에 있던 홍보비서관실을 대폭 확대, 4명의 비서관(대통령PI, 국정홍보, 인터넷소통, 연설기록)을 산하에 둔 홍보기획관실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정부도 비슷한 일이 반복 되었습니다.

세 기능은 2013년 새 정부 청와대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나 인터넷 소통을 담당하는 비서관실을 국정홍보비서관실과 통합했습니다. 인터넷 소통 조직 축소가 전체 정부기관 담당자들에게 준 신호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민간에서는 이미 유통의 흐름이 홈쇼핑과 인터넷쇼핑을 넘어 모바일쇼핑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마치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의 유통망만을 고집하는 생산자처럼,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바뀌는 부처 대변인들이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공보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실력 있는 온라인 소통 담당자들은 조금 더 자신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자리로 옮겨 갔고 예산은 줄어들었으며 보수 진영의

논객과 매체들은 불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선거 때 만들어졌던 책임 있는 진영의 온라인 소통 순환 구조가 깨어져 갔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개혁정책의 진정성보다 이를 폄훼하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최근 청와대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소식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소통이란 무엇일까? 먼저 소통의 사전적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1) 사물이 막힘이 없이 잘 통함. (2) 의견이나 의사 따위가 남에게 잘 통함.

우리는 어떤 경우를 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보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원활한, 잘 이루어진' 소통이라는 평가는 '말 잘하는' '말 많이 하는' '세계 말하는' 소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내가 같은 언어를 쓰는지,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지, 내 생각의 전달 채널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 그 채널이 활성화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통은 소통의 결과에 의해 평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관적 소통 가능성(가능할 것이라는 느낌, 기대감, 혹은 이미지)에 의해 이미 판단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외국인과 대화를 할 때 나는 이 언어를 쓰는데 상대가 나와 다른 언어를 쓸 것이라고 예단하면 입을 떼기도 전에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선거이후 중간지대에 있는 상당한 수의 국민들이 기대하는 언어가 아닌 정부와 대통령의 언어로 소통이 시도되고, 또 국민들이 새롭게 많이 이용하는 채널이 아니고 전통적 채널만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수천만명의 국민들이 아침마다 눈을 뜨면 만나게 되는 포털 앱의 첫 화면 뉴스에 조·중·동과 같은 메이저 신문의 기사가 아예 없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상대(국민)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채널(미디어)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어 내고, 그 채널을 통해 서로 공감의 영역을 늘려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는 것이 소통의 처음이고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국정외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 현장에서 온라인 소통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을 정리합니다.

1. 이제 소셜미디어(IP 미디어)를 이용하는 소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 문제이다.

- SNS의 이용 경험이 없거나 이를 잘못 이해하는 관료들의 제도, 교육 필요 (ex.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사건)
- 매스미디어가 따라가지 못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읽지 못하면 그 공분은 너무나 크게 발생(ex. 일명 조두순사건)
- 피상적 이해에 머무르는 디지털 이주민(immigrant)은 디지털 네이티브(native)를 이해 할 수 없으니 젊은 전문가에게 권한을.
- SNS 서비스별 존재하는 나름대로의 문법과 효과적 활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 (ex. 인포그래픽스)

2.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용 함의를 마련하지 못해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사회 통합 기능보다는 오히려 소득, 기술, 혹은 연령의 격차로 일어나는 디지털 디바이드(divide)의 문제점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 국회가 제기하고 있는 뉴스 편집의 공정성 문제, 검색의 영향력과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 포털 (IP)미디어 편집진의 구성, 경력, 사회적 기능, 재교육 - 언론진흥재단의 역할 확대
- 정부나 개인이 잘못해서 받는 비판과 비난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과 경각심 강화

3.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해 소셜(IP)미디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도 그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의 이름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다.
- NAVER : SBS 의 시가총액 23조5천6백억 : 7600억 (2014년1월18일 기준), 올해 말 라인 가입자 5억 돌파
- 카카오톡 : 가입자1억3천만, 13개 언어로 제공. 최대 55억건(최고 분당 600만건), 청소년의 절반이 하루 평균 2시간 이용
- 50-60 세대들은 익숙하고 편리한 TV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그러나 이 세대도 카카오톡은 상당히 많은 수가 이용하고 있다.
- 포털 모바일 뉴스의 구성과 이용형태 (메이저 언론 제외 , 12월 19일 NAVER 뉴스 페이지 뷰 PC 6300만, 모바일 1200만 명이 2억)

4. 좌·우의 진영 논리에 따른 주장보다는 양쪽이 동의하는 권위의 FACT 체크 기능이 진보와 보수를 연결해야(미국의 경우 폴리팩트가 2007년 폴리처상 수상)

- FACT의 검증과 확인 기능이 없으면 인터넷 최고의 강점인 '집단지성'이 사실과 관계없는 '집단감성'화 되는 문제점 야기
- FACT에 대한 확인 없이 정당한 약자가 부당한 강자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인식의 틀이 만들어지면 폭발적 확산 (7번가의 선물)
- '사설속으로' 와 같이 유리되어 있는 진영간을 FACT로 연결 해 주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

5. 정부의 소통 기능 재편, 혹은 조율이 필요하다

- 신문, 방송정책 담당이 있듯이 소셜미디어(인터넷소통)을 담당하는 정부 기능 필요 (신설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문화부, 미창부 등 어느 한 곳이라도 담당업무 명확 필요, 정보화진흥원, 인터넷진흥원, 언론진흥재단 등도 역할 불명확)
- 정부는 다양한 콘텐츠 생산기능을 보유, 다만 유통을 통한 활용도에 대한 평가 부재로 인해 시너지를 못 내고 있음. (문화부 소통실, 정책방송KTV, 최고 연예사병을 보유한 국방홍보원, 아리랑TV, 일자리방송, 소방방재TV 및 기본탐재앱, 지경부 인터넷방송 등)

보수의 북한 콤플렉스와 진보의 시장 콤플렉스가 괴담을 만든다

김 대 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민영화 괴담의 뿌리: 피해의식, 지적나태, 악의적 선동을 어찌할 것인가?

철도 사태는 진보 진영에 만연한 시장에 대한 피해의식, 게으른 실사구시, 악의적 선동과 정공법 보다 편법을 즐겨 써온 정부의 정책 추진 행태가 부딪힌 부끄러운 갈등이다.

사실 정부가 철도의 전부 혹은 확실히 돈 되는 일부 노선을 민간 회사에게 팔아버리겠다고 한다면, 이는 명명백백한 특혜이기에, 노조의 결사 항전은 설명하기 쉽다. 진보진영과 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발도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정부는 민영화 할 의사가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소유(지분) 구조도 코레일 41%, 공공기관(자금) 59%다. 정관에서도 민간에 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 노조는 이를 믿지 않고 민영화의 전초단계라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영화 전초단계론'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철 코레일 사장과 오건호씨는 공공자금 59%가 들어온 것 자체가 민영화라고 하였다. 민영화는 자명한 약으로 간주하였다. 물론 설득력이 생길 리 없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진보 성향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요금 폭등, 적자 노선 폐지 등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었다. 한편 경제학 원론 정도를 공부한, 노조 투쟁 지지, 성원자들은 일부의 철도 민영화 실패 사례(?)와 자연독점 산업인 망산업(철도, 가스, 전력 등) 민영화의 부당성을 줄줄이 늘어놓았다. 정부는 재벌대기업과 외국 자본에게 특혜를 주지 못해 안달하는 사악한 존재로도 되었고, 국가독점 보다 더 나쁜 민간독점의 패악도 모르는 바보도 되었다. 그래서 상식을 가진 사람에게 이 갈등을 설명하기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수서발KTX는 별다른 경영혁신 노력이 없어도 매년 수천 억 원의 흑자가 기대되는 알짜 사업이라는 것, 정부는 이를 기존의 철도산업 독점 공기업인 코레일과 별개 회사(자회사)로 만든다는 것, 코레일은 공기업 특유의 방만경영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실패 등 불운이 겹치고 덩쳐 부채가 17조6천억원(부채비율 430%)에 이르고, 매년 수천 억 원의 적자가 난다는 것(작년 3300억원, 올해 2500억원, 내년 1500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레일 임직원들은 하는 일에 비해 근로조건은 높고, 노조가 쟁취한 단체협약은 상식에 반하는 조항이 많다는 것, 수서발KTX가 코레일 채무나 비용을 많이 떠안지 않는다면 코레일의 수익구조는 더 나빠진다는 것 등이다. 현재 철도 사태를 둘러싼 갈등의 주요 당사자들은 이 명백한 사실조차 외면하면서, 생산적인 논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철도 사태와 다시 창궐한 민영화 괴담을 통해 극심한 불신과 피해의식과 악의적 선동의 회오리가 또다시 불어 닥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진보 지식사회의 게으른 실사구시 기풍과 함께 격렬하고도 소모적인 갈등을 낳는 수원지라는 것은 불문가지! 민영화 괴담으로 집약된 불신과 피해의식은 기본적으로 정권, 정부와 시장, 기업을 향한다. 요지는 정권 및 정부가 돈벌이에 혈안이 된 대기업과 외국 자본에게, 과거 한국이동통신을 선경(SK)그룹에 넘길 때처럼 명백한 특혜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철도나 의료 등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정책 혹은 일부 가치생산사슬을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정책은 정권과 기업이 공모한 국민재산약탈로 비칠 수밖에 없다.

피해의식과 악의적 선동은 논리 문제가 아니기에 접어두자. 꽤 이성적인 진보 인사조차도 민영화를 자명한 악으로 간주하는 것은, 외환위기, 양극화 심화, 일자리 부족, 경쟁 격화, 비정규직 폭증 등의 원인을 대처, 레이건이 확산하고, 미국 유학과 학자들과 관료들이 수용한 신자유주의에서 찾기 때문이다. 사실 이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변화부침이 극심한 글로벌 시장환경에서 자본(기업)의 생존=이윤추구를 위한 몸부림 자체가 일종의 '악덕'으로 된다. 쌍용차, 한진중공업 등 산업기업의 구조조정, 고용임금유연화=합리화 정책도, 각종 개방화(FTA) 정책도,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모든 정책들도 하나같이 자본운동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의 이면에는 세상을 자본과 노동의 대립투쟁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낡은 사고습관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듯, 낡은 프레임과 1980년대 이후 시대의 대세가 된 세계화, 자유화, 시장화, 개방화, 민주화 흐름에 대한 무지, 착각이 결합하고, 피해의식과 악의적 선동까지 가세하면서, 상식에 한참 어긋나는 이념과 정서라는 괴물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와 사회의 활력을 억누르고 있는 국가관료와 이익집단이 합작한 기득권 과보호용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덮여 버렸다. 한국 노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슈퍼갑'과 '갑' 기업의 독과점거래와 불공정거래도 덮여 버렸다. 절실히 필요한 개혁 담론이나 생산적인 논쟁들이 몽땅 괴담 회오리에 빨려가서 자취를 감추었다.

돌아보면 한국 보수 여론의 주도층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두 정부가 대한민국을 북한에 팔아먹는다고 난리였다. 진보 여론의 주도층은 한미FTA 협정에 대해, 한미쇠고기 협정에 대해 미국에 나라를 팔아먹는다고, 광우병 쇠고기로 '뇌송송 구멍 탁' 어찌구 하며 난리였다. 지금은 재벌대기업과 외국자본에 자연 독점 산업인

철도를 팔아먹는다고 난리다. 그런데 과연 이게 의심할 만한 일인가? 그런 점에서 한국의 보수, 진보의 여론 주도층은 어떤 심각한 정신적, 사상적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는 실사구시 기풍과 세련된 정책 추진으로 풀 수밖에 없다. 인내와 설득은 기본이다.

많은 사람이 간과하지만, 이번 철도 사태를 통해서 확인된 불편한 진실이 몇 개 더 있다.

첫째, 글로벌 시장에서 생사를 건 경쟁을 하는 민간기업의 적자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큰 만큼, 임직원들이 상당한 책임을 느끼지만, 서비스 가격(요금) 규제도 받고 있고, 또 적자가 나도 무조건 유지해야 하는 서비스도 많고, 아무런 혁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막대한 흑자가 나는 서비스(KTX경부선, 수서발KTX 등)도 있고, 구조적으로 적자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서비스도 뒤섞여있는 공기업들은, 사업별 비용-편익-수익(채산)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회계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한, 경영실적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임직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서비스 요금 인상하고, 막대한 흑자가 나는 독점 상품(노선)을 신설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둘째, 한국 공기업들의 주인은 사실상 노조라는 것이다. 글로벌 경쟁을 하는 재벌 대기업은 생존과 번영(팽창)에 목숨을 건 오너, 경영진, 관리직이 있지만 공기업은 없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재화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기에 생존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팽창은 민간 시장 영역 침범을 의미하기에 시장 교란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신의 직장'이라는 소문 안 나게, 끼리끼리 잘 먹고 잘사는 것이 경영진과 노조의 확고한 컨센서스다. 게다가 낙하산 경영진과 감사들은 2~3년 있다가 흘러가는 존재지만, 노조는 영원하다. 그래서 사실상 주인이 되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제도적 독점 체제 하에서 호의호식하는 노조는 유럽의 노조와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농협과 유럽 농업 협동조합의 차이만큼이나 크다. 물론 한국 정치/정당과 유럽 정치/정당의 차이도 그 정도는 될 것이다.

아무튼 한국 노조는 지불능력이 허용하면--이 역시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노동의 질'이 어쨌든 임금, 복리후생, 정년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직장 대물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평성과 연대성 개념 자체가 없다는 얘기다.

공평성은 노동의 양, 질과 우리의 생산력과 생산물 시장 구조에 상응하는 처우와 지위를 의미하고, 연대성은 갑-을, 성안-성밖, 공공-민간, 현세대-미래세대의 억울함, 고단함, 불안함을 공감, 공유하고 배려하는 생각을 의미한다. 분명한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평성과 연대성을 상실한 연대조직(노조, 협동조합, 직능협회, 정당)은 일종의 조폭 집단이나 도적 집단일 수밖에 없다. 국민을 약탈하고, 중소기업체들을 약탈하고,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회와 희망을 약탈하기 때문이다.

셋째,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은 정당과 정부 역시 정의와 공평의 칼을 휘두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부당한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니, 노조 등 사회의 기득권 집단의 행태를 정면으로 문제 삼지 못하는 것이다. 어쨌든 정부는 그 구조가 어떻든 큰 적자가 나와 그것을 빌미로 고용, 임금, 복리후생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독과점 이익이 크게 나면 감히 문제 삼지 못한다는 얘기다.

확실한 사실과 거의 확실한 불편한 진실과 보편 상식을 결합하면 철도 문제 해법의 기초는 그리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 쉽게 버는 업역, 즉 소비자·이용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독점업역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 독점은 최악, 국가독점은 차악이며, 국가독점하의 복수 사업자의 경쟁체제는 차차악 짬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시장경쟁도 민영화도 결코 악이 아니며, 다만 민영화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망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공정한 시장 경쟁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가치사슬(value chain) 일부를 떼어 낼 수도 있다. 시장 경쟁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부 가치사슬(토지와 철로 등)은 국가가 소유하고, 서비스 가격과 근로조건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만약 시장에 운명을 맡긴 생산성 높은 민간기업 수준의 근로조건과 더불어 완전한 노동3권을 누리려면 국가독점을 포기하고, 시장원리 내지 소비자 선택, 심판권에 생사를 맡겨야 한다. 국가독점 공기업은 재벌대기업의 사유화 못지않게, 노조를 중심으로 한 임직원들의 사유화도 경계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이 같은 상식을 근간으로 하지 않고, 국가독점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주인 부채 탓이라거나, 과다 부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노조가 져야 한다거나, 정반대로 방만경영에 대한 노조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식이다.

정부도 코레일과 공공기관 일반의 수많은 모순부조리를 정면에서 다루지 않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수서발KTX)를 코레일 손에서 빼들려 손쉬운 경영 정상화(?)를

회피하는 듯한 꼼수를 쓰는 것처럼 보인다. 철도 노조 역시 손쉽게 수천 억 원의 돈을 벌 수 있는 수서발KTX를 확보하여 경영합리화 압력을 비껴가려고 하고 있다.

정부도 노조도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이번 파업은 정부 보다 노조가 훨씬 심하게 틀렸다고 보아야 한다. 노조의 요구는 한마디로 지금 이대로다. 거기에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 추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어쨌든 코레일 독점체제를 깨려 한다. 코레일을 포함한 공기업 근로조건도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 정년 연장도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의와 상식에 가까운 것 아닌가? 정부의 거친 탄압과 성급한 절차는 층위가 다른 문제이다.

지금 한국 사회는 주먹 불끈 쥐고 '우리 편 이겨라!' '저놈들 죽여라!' '(우리편이 누려온 기득권) 사수하자'고 소리치기 전에, 이 대립·갈등 구조가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내가 성원하는 집단의 행위가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괴담 확산 방지를 위한 당·정·청의 위기관리론

김 구 철

(위기관리전문가)

1. 정부/코레일의 대응 평가

1) 당·정·청의 역할 분담 부적절

- 정책대결이어야 할 코레일 경영 문제가 정쟁화됨.
- 총사령부의 최고위 참모들이 직접 칼에 피를 묻힌 셈
- 역할 분담이 부적절했기 때문

2) 최악의 사태에 대비했나?(p. 196)

-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은 정부, 코레일
 - 연말연시 파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의 파업
 - 철도 수요가 가장 큰 시점(연말연시/방학/휴가 등)의 파업
 - 파업 지도부의 민노총 본부, 조계사 농성
 - 노조와 민주당 등 야당과의 연대로 정쟁화
- 실제 전쟁에 아무 대비가 없었다.
 - 노조가 작은 이슈를 터뜨리면 그제야 대응 논리를 개발하느라 부산했다.
 - 이슈마다 예상 답변이나 해명을 준비해 두었다가 즉각 조처했어야. (입사 17년차가 하루 15시간 한 달 꼬박 일해야 연봉 6천만원 주장)
 - 전투 양상과 전역을 예상해 전력을 배치하고 무기와 탄약, 식량을 점검해야.
- 마음가짐이 안이했던 코레일과 정부
 - 전장에 투입된 일선 전투부대가 전투 행위를 피하는 사례는 없었는지?

3) 여론 주도권 상실(p. p. 206)

- 이일대로(以逸待勞) 전쟁이나 전투의 원칙
- 초기 여론 주도권 상실한 결과 민영화 피담이 논쟁을 지배

Positioning 이론

- 한번 마음속에 자리 잡은 서열을 바꾸기 어렵다. 먼저 보고하는 쪽이 여론 전쟁에서 절대 유리

- 노조가 원하는 시기, 장소, 이슈로 전투하다 보니 판판이 깨지는 형국
- 노조가 주도하는 이슈를 따라가기에 급급한 대응

○ **실기한 대응은 대응이 아니다(p. 213)**

- 진정성은 홍보에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속도가 문제다.
- 과거 신문 시대에는 48시간. 방송은 12시간. 인터넷, SNS는?(p. 166)
- 불리한 전투는 일단 포기하는 것도 훌륭한 전술: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의 덩케르크 후퇴(30만 영국군 후퇴), 몽고메리 장군이 사막의 여우 롬멜을 격파한 전략 (후퇴를 거듭함으로써 롬멜 독일군의 보급선이 길어져 독일군이 결국 패퇴)

○ **국면을 크게 바꿀 기회(p. 312)**

- 80대 할머니가 추락사한 시점
- 귀족노조에 의한 살인 파업으로 규정했다면?

4) 목적과 수단의 전도 현상

- 목적 '안전하고 편리하고 값싼 철도 운행 서비스': 코레일의 설립 목적/ 정부 철도 정책의 목적/ 노조의 궁극적 설립 목적
- 실제 : 궁극적 목적은 실종되고 눈앞에 닥친 전투의 승리만이 목적
- 사례들: 역사 교과서 논쟁 - 민족 자긍심, 국민 통합, 다양한 역사 인식(다양성), 획일적인 진보 역사관 주입

5) naming/framing 실패(p. 265, p. 208)

○ Naming 실패 : '방만한 경영'의 개혁

- 방만한 경영이라? 누구 책임인데?
- 인사와 예산(경영진 임명/예산승인/결산 승인/주요 사업계획 승인-정부)
- '귀족노조' 개혁으로 잦아야

○ framing 실패(p. 208)

- 정책 대결로 나아갔어야 했으나 정쟁화

노조가 원하는 전쟁	민영화
정부 여당이 택했어야 할 전쟁	귀족노조 개혁

○ **괴담과 민영화 논리의 plausibility(p. 62)**

- 독버섯의 조건 : 씨, 온도, 습도, 일조량 괴담의 조건 : plausibility
- 상식있는 사람이라면... (토론자 본인/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언급 2014. 1. 15 간담회)
- plausible한 대안을 미리 제시하지 못한 정부/코레일의 책임
- frame의 뒷에 걸린 정부/여당 :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할수록 민영화 논리는 확산

○ 영화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 오류 있는 다큐멘터리 vs. 리얼리티가 있는 허구(영화)
- Negative System vs. Positive System
(지적되지 않은 모든 것은 진실 vs 지적되지 않은 모든 것은 허구)
- ‘그 영화 재미있더라. 꼭 사실 같던데...’식의 여유 있는 논평 나왔어야.

2. 개선 방안

1) 리스크 관리와 위기

Risk ⇨ 위험요소	Emergency ⇨ 비상 상황	Crisis 위기
----------------	----------------------	--------------

2) 바람직한 당정청의 역할 분담

○ **트렌드의 변화**

- 20세기 굴뚝산업에서는 생산과 판매가 중요
- 21세기 글로벌 기업은 모두 전략기획, 홍보마케팅에 주력

맥킨지 방식(p. 294)

전략기획	생산	홍보마케팅	판매
정책기획	정책수립	정책 홍보	정책 집행
홍보기획	콘텐츠 제작	콘텐츠 홍보	홍보 집행

	큰 틀에서의 역할 분담	홍보 전쟁의 관점에서
청와대	전략기획조정, 홍보마케팅	홍보기획조정
당	홍보마케팅(여론 수렴)	콘텐츠 홍보(여론수렴)
정부	정책 생산, 정책 집행	콘텐츠 생산, 홍보 집행

3) 큰 틀의 대안

○ Agenda를 주도하라

- 부문별 당정 협의를 통해 국정 Agenda를 순차적, 선제적으로 제시
- 일하는 정부여당, 논쟁을 주도하고 어젠다를 선점하는 정부 여당이라야.

사례) 2012년 ‘경제 민주화’ 이슈를 선점함으로써 총선과 대선을 승리한 새누리당

○ 구체적 이슈에 대한 야권의 저항에 대해

- 합리적인 것은 수용해 반영하는 대응적이고 포용력있는 정부 여당
- 비합리적인 반대는 ‘21세기 반대 프레임의 덫에 빠진 야당’으로 맹공

○ 정책 논쟁과 정쟁의 분리

- 여권은 정부와 산하연구기관 등 막강한 싱크탱크 보유
- 가능한 한 정책 논쟁으로 끌고 가야 유리

4) 홍보의 체계화

- 전쟁 수행의 방식(1990년 이라크 전쟁의 예)
 - 1단계 - 특수부대 침투, 표적지 붙이기
 - 2단계
 - 2-1 단계 - 크루즈 미사일, 스텔스 전폭기 투입, 통제본부, 통신본부, 통신망, 레이더기지 파괴
 - 2-2 단계 - 아파치 헬기 : 레이더 기지, 대공포 파괴로 안전 통행로 확보
 - 2-3 단계 - 전폭기 : 탱크부대 등 지상군 핵심 화력 파괴
 - 3단계 지상군 투입

- 과학적인 홍보라야
 - 1단계 - 은밀한 표적지 붙이기(언론 시민단체 학계 주요경제단체 문화예술인등)
 - 2단계
 - 2-1 단계 - 상대에 대한 교란 작전/‘불법’ 논쟁 등
 - 2-2 단계 - 공식 기자회견 등
 - 3단계 - 관련 정부 부처, 당 조직 총동원한 다층적 홍보 활동 필요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는 정책정당 발전을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책세미나 자료집」의 전문을 www.ydi.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게재된 내용은 발표자 및 토론자의 개인 의견이며,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의도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22 기계산업진흥회 신관 3층
전화: (02) 2070-3300 팩스: (02) 2070-3331 (우 150-729)